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제145호 2023 9, 10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가을 하늘

04	권두언	축제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양희
05	기획1	대구 중구의회,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강금수
07	기획2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과 위기의 공동체 김문주
10	국제기획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향해! 사토 유키마루
14	노동현장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전환하라!” 정은정
16	Art & Culture	아세아극장과 로보트 태권브이의 추억 김병호
19	젠더비평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차우미
22	청년비평	청년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성급한 말 조영태
24	칼럼	산재보험처럼 의료사고보험도 필요하다 김윤상
27	특별기고	‘위안부’ 운동 30년 (2) 양장자
32	이달의 회원	장지혁 전.정책부장 김선희
35	아! 이 사람	김윤상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김선희
38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40	재정보고	
41	회비납부명단	

표지이야기

우리 모두의 어머니(Mother of Everyone), 헨드릭 바이키르히(Hendrik Beikirch)작(독일)
작품크기:13x35m

이 벽화는 과거 영도 대평동에서 녹슨 배의 표면을 걷어내기 위해 하루종일 망치질을 했던 ‘깡깡이 아지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작가 헨드릭 바이키르히는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대동대교맨션 외벽에 이 거대한 벽화를 그렸다. 단 5일간 그린 이 작품은 전통적인 그래피티(스프레이 드로잉)작품이다.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적 성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먼 이국의 작가가 한국의 낯선 도시에서 이 같은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깡깡이라는 말은 영도의 조선소에서 배의 페인트와 녹 따위를 벗겨내던 망치 소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2017년 완성된 이 작품은 같은 도시 부산 광안리 민락시장의 한 건물 외부에 그려졌던 그래피티 작품(어부의 초상, 오른쪽 사진)과 더불어 부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벽화라 할 만하다.<화가 김병호>



*어부의 초상, 헨드릭 바이키르히 작(2012)

축제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양희 동구주민회 운영위원장

축제의 계절이 끝났습니다.

짧은 가을이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함께 어울리지 못함을 풀어버리기라도 하듯 지역마다 동네마다 잠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축제는 잠깐이지만 일상은 지속됩니다.

“밥상에 풀밖에 없네”라고 하는 반찬 투정도 오래전 드라마에서나 듣던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채소 가격이나 고기 가격이나 모두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에 더해 이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까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작은 마음도 빛이 납니다.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확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겨울이 오기 전 김장을 하고 겨울 난방을 준비해야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 채비를 하듯 우리 단체도 겨울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온 걸음이 25년째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단체의 걸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걸음도 더 나아지는 다음을 희망합니다.

더 아름다운 봄을 향하여. 

대구 중구의회,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방의원들의 일탈, 위법 행위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우리 지역 기초의회의 천태만상은 더욱 심각하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대구에서는 서구의회는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로 지탄받았고, 수성구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에게 접시를 던지고 욕설하여 징계받았으며, 경북에서는 영천시의회 의장이 공무원에게 갑질하여 노조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경산시의회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야당 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폭거가 있었다.

대구 중구의회,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그러나 어느 의회도 현재 대구 중구의회에는 미치지 못한다. 중구의회는 7명 의원 중 대부분이 범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로 지탄받았고(아래 표 참조), 의회 자체도 의원들끼리 편 갈라 싸우는 진흙탕이 되었다.

대구시 중구의원들의 전태만상		
의원명	문제점	비고
배태숙	- 유령회사 통한 불법 수의계약 - 의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받음 - 시민단체가 형사고발, 수사 중	사과, 반성 없음
권경숙	- 아들 회사가 중구청 등과 불법 수의계약 - 본인 의원 시기에도 불법 수의계약	징계처분 없음
김효린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참여, 부정수급 - 공무원에게 지나친 자료요구, 갑질 물의 - 의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받음	
이경숙	- 공무원에게 지나친 자료요구, 갑질 물의 -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 상실	
안재철	- 윤리특별위원장 재직 중 동료의원 비호	사과, 위원장직 사퇴
김성오	- 배태숙 의원 불법 수의계약 알고도 묵인 - 의장의 윤리적 책무 방기	

그럼에도 의원들은(안재철 의원은 나름의 책임을 졌지만) 책임있는 사과나 반성도 없고, 의회의 윤리기능을 작동시켜 제때에 엄정한 징계를 하거나 쇠신하기는커녕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편을 갈라 싸움질

을 일삼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의회 본연의 역할인 구정감시나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 입법활동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런 지경이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의원들 월급 주기 아깝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주민들의 불만은 정당하다.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제도개혁, 주민감시 더욱 필요한 때

그러나 모든 의회가 얼마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를 폐지할 수는 없다.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직접민주주의로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는 더욱 주민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광역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권력이 집중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많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주민들의 직접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공천개혁이 필요하다.

인격과 자질, 역량이나 주민의 평가보다 돈 있는 사람, 당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를 우선하는 문제가 있다. 공천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윤리의식과 의정활동 역량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공천관리 기탁금 등 금전적 장벽을 낮추고, 당원이나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개방적 공천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독점을 해소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 특히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영남지역에 문제가 더 많다. 수십 년 같은 당이 의회, 단체장을 석권, 정치와 행정, 경제의 유착이 고착되어 있고, 웬만한 범죄는 죄의식도 갖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뿌리 깊다. 지방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4인 이상 중대선거제를 도입하고, 시민들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과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광역의회의 소선거제, 기초의회의 '무늬만 중선거제'를 개편하지 않을 거면 최소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

셋째, 주민의 직접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회 스스로 하지 못하면 주민이 심판해야 하는데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이 너무 낮아 무용지물이다. 주민소환 서명인 수 등 발의 요건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시민의회의 도입도 필요하다. 의원 징계 문제 등 의원들 자신의 문제나 여야 정파의 이해관계가 극렬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중립적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민의회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있는 제도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

해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을 배제하고, 윤리특위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의원도 제척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각계 전문가의 형식적 안배가 아니라 공익활동과 청렴운동에 앞서 온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비 지급 중단 또는 환수하는 선례를 남길 필요도 있다.

끝으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도 더 체계화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직접적 감시와 견제이다. 주민들이 감시단을 꾸려 모니터, 평가, 제안 등 직접적 목소리를 내고, 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등의 운동에 나선다면 지방의원들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위한 진일보한 노력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과 위기의 공동체



김문주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공동대표

내가 '나' 일 수 있는 이유는 기억(記憶)에 있다.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나' 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흔들리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나는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관한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은 자기 정체성의 근간이자,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핵심 자질이다. '나' 의 정체(正體), 즉 '나' 라는 존재의 본질은 축적된 경험과 그 경험에 기초한 의식의 지향 위에서 구성된다. 내가 '나' 일 수 있도록 하는 기억은 이 둘을 포함한 것이며, 이 기억에 의해 나는 '나' 로서 살아가게 된다. 기억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존재 지속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억이 훼손되면 그간의 '나' 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며, 이는 한 존재의 정체성을 흔들거나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이 한 존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간이라면, 역사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기억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는 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일이자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 구성원들의 몸과 머리에 쓰는 작업이다. 역사를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집단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역사란 단순한 경험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 그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성을 담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記憶)이, '쓰다' '기록하다' 의 기(記), '떠올리다' '생각하다' 의 역(憶)이 결합한 말임을 상기한다면, 그래서 역사란 과거의 경험적 사실(事實)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때의 경험이란 지금-여기에서 불러오는 사실(史實)임을 감안한다면, 역사는 단순한 사실(事實)의 기록이 아닌 한 공동체의 가치나 지향과 관련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한 공동체의 역사의 문제를 역사관 혹은 역사의식과 결부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역사는 한 집단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그러한 점에서 역사의식은 과거 사실(事實)의 취사선택이나 경중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한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해가는 방향타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기억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성을 담지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의 역사의식의 엄중함은 그것이 공동체의 정체성, 공동체의 방향을 구성해가는데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 고 한 것은 자신이 만들어갈 정부의 성격, 그 정체성을 공약(公約)한 것이며, 이는 대한

민국의 역사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역사의식의 천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결절점을 넘어서고 오랫동안의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의식의 큰 진보(進步)의 가능성을 연 것이었지만, 이것이 분명한 허구임을 드러내 보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이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이후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였다. 국정 철학의 중요성, 좁게는 국가 이념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상식적이며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구체적인 행보들은 대통령이 말한 이념이 시대착오적이며 지극히 퇴행적인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 이념의 일부를 구성하는 역사의식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처리에서 매우 분명하게 그 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시발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기업이 출현한 기부금을 통한 제3자변제안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이와 같은 해결방식은 일본 국가권력이 개입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배상을 기대했던 피해당사자들의 염원을 전적으로 배반한 것이면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자국민의 숙원(宿願/宿怨)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근대사에 가장 중요한 문제지대인 일제강점기와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나 역사의식이 공동체의 정체성 구성, 나아가 공동체의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역사적 피해사실을 일방적으로 덮고 국민공동체의 자존(自存)을 접으면서 만들어가야 할 한·일간의 발전적 미래란 과연 무엇인가?

강제징용 문제 이후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 왔으며, 그 배후에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끝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묵인과 반국민적 대응이, 또 다른 한편에는 미국의 패권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한 축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일본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체의 주체적인 역사의식의 정립과 자존이라는 점에서 접근한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축으로서 한·미·일 동맹에 매우 거칠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성노예, 독도, 일본 역사 교과서, 동해 표기 문제 등 민감한 역사적 현안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저한 무대응에는 한·일간의 문제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팔호 치려는 의도가 작동하는 듯하다.


미국의 패권 강화의 한 축인 한미일 동맹에의 종속을 의미하는 윤석열정부의 친일 행보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역사 문제의 한 축은 최근 육사의 흥상 철거 과정에서 촉발된 역사적 인물들-홍범도, 이승만, 백선엽 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다. 한·일 간의 문제가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이나 국제적 관계 속에서의 대응이라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 역사의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에서의 논란이 건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통의 기원을 상해 임시정부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이승만 정부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고,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민족사적 관점과 연계한 항일운동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분단 체제의 시작인 이승만 정부로 볼 것인지의 시각차를 담은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항일운동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른바 좌익계열의 운동가들을 대한민국의 법통 논의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의 한 축을 구성해온 독립운동 세력을 갈라치기하고 항일의 문제를 반공의 이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함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의 보수 정부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의를 매우 거친 방식으로, 퇴행적인 이념의 차원으로 전회(轉回)하려는 의도가 윤석열 정부의 역사 문제에 관한 대응 속에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항일독립운동 인물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역사적 맥락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으로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동적 배제를 노골화함으로써 공동체의 역사의식을 혐애화하고 국민을 이념의 진영으로 갈라치는 분열적 책동이다. 이는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그간 민족사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을 무화하는 반민족적 작태로서, 그것은 북한을 명확한 현실의 주적(主敵)으로 돌려세우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불편한 상태를 이어가는 최근의 외교 행태에 닿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역사에 대한 반동적·퇴행적 인식을 드러낸 인사들을 참으로 과감하게(?)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사회가 꾸준히 진행시켜온 역사적 상식과 진일보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우리 공동체 내부를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한반도를 위험지대로 몰아가는 반평화적 행태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항일운동이 아닌 이승만의 반공 정부에서 찾는 윤석열 정부,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칠 뿐 아니라 반복 반민족 반평화적 퇴행 앞당겨

공동체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어떻게 기억하며 어떠한 태도로서 다루는가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역사 문제는 정체성의 영역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과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사회가 우여곡절 속에서 진척시켜온 공동체 역사의식의 전제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크게 흔들리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대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이전의 보수 정부들에서 보이던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유보적인 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없는 위험한 질주이다. 이전의 어떤 정부에서도 감히 발탁할 수 없었던 몰역사적이고 반사회적 인식을 지닌 인사들이 주요 국무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상식적 합의선(合意線)마저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는 우리 공동체를 안팎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역사의식은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간이면서 공동체의 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교정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엄중한 우리 공동체의 현실의 문제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향해!

사토 유키마루(佐藤雪丸) 『「전쟁법 폐지! 9조를 지켜라」 호소 행동 가마쿠라』 대표

한국 대구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쟁법 폐지, 9조를 지켜라!」 호소 행동 가마쿠라』라는 시민단체입니다. 활동 지역은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와 요코하마의 경계에 가까운 오후나(大船)라는 곳입니다. 인근 가마쿠라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3대 역사도시(교토, 나라 등)의 하나이지만,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인 오후나는 특별히 역사적 유산이 많아서 관광객이 많이 찾거나 경치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2015년 일본 국회의 '안보 관련법' 강행 처리 당시 시민사회의 개헌 반대 구호 「전쟁법 폐지! 헌법 9조를 지켜라 아베 내각 퇴진!」을 내세우고 있다.

「9조를 지켜라!」의 '9조'란 일본 헌법 제9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법'이란 2015년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시위 속에서 당시 아베 정권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안보 관련법'을 가리킵니다.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에 공포되어 이듬해에 시행되었습니다. 전문과 10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헌법의 3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전문과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에는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국민의 정의와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공포와 궁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헌법 제정사유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추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법 폐지! 9조를 지켜라!』 호소 행동 가마쿠라』는 우익 정치인들의 ‘안보관련법’의 제정 움직임 속에서 그 성립에 반대하며 2015년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당시 일본 전역에서 반대의 목소리와 시위, 조직이 생겨났고, 국회 앞에는 연일 사람들이 모여 반대의 뜻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모처럼 젊은이들이 리더미컬한 구호로 집회를 이끌었고 12만 명이 국회를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법 폐지! 9조를 지켜라!』 호소 행동 가마쿠라』 출범한 2015년 7월, 가마쿠라 시내의 평화 단체의 주최로 「전쟁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이 85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나 시내에서 개최됐다.

그러면 왜 이처럼 국민들 사이에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이를 위한 조직까지 만들기에 이른 것일까요. 전후 일본 정치, 사회에서는 헌법 9조와 자위대, 자위대의 존재 방식(활동 범위, 조직, 장비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일본 제국은 조선, 대만을 식민지로 지배했고, 1931년부터 시작한 침략전쟁은 15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1945년 연합군에게 패하며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포츠담 선언에 따라 구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지는 해방되고 군사력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주둔했던 점령군(미군 중심)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출격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령군의 지시로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포츠담 선언에 위배되는 재군비(再軍備, 일단 없었던 군사 설비를 다시 갖추는 것)이며, 이후 자위대는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자민당 정권(최근 10년 이상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은 무분별하게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규

제를 완화해 왔지만, 헌법 9조의 규제 아래 자위대는 해외에서 「'무력행사'는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관련법」(여러 법안을 일괄적으로 심의, 의결)에는 지금까지 자민당 정권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위대가 일본 영토, 영해, 영공의 범위 내에서 일본 국토의 방위('전수방위')와 무관한 타국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동맹인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출병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헌하는 사실상 위헌적인 법률이며, 이를 통해 평화에 관한 전후의 발걸음을 크게 바꾸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현 기시다 정권은 아베 정권의 개헌의 연장선상에서 9조 자체를 바꾸는 명문화 개헌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보 3문서(국가안정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각의 결정(국회 논의 없이)하고, 적기지 공격능력(선제공격) 보유와 5년간 43조엔의 대규모 군비증강(군사비 2배)을 단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정거리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마구 사들여(미국 군수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 올라서려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 국가를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이러한 개헌 움직임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으로 아시아에서 2천만 명, 일본에서만 3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반성하고,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본국 헌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 「전쟁법 폐지! 9조를 지켜라! 호소 행동 가마쿠라」가 출범한 2015년 7월, 가마쿠라 시내의 평화 단체의 주최로 「전쟁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와 가두행진이 85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나 시내에서 개최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작은 조직이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월 3일과 19일(「전쟁법」이 강행 통과된 날) 두 차례, JR 오후나역 앞에서 한 시간씩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가자는 10명 안팎이지만, '개헌 발의 중지', '대군 확대 증세 반대', '적기지 공격 능력은 선제공격에 해당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마이크를 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 서명을 받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군비 확장-대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로 이 시위는 180회째를 맞았습니다.


그중 스티커 투표를 12회 실시했습니다. 스티커 투표는 특정 주제에 대해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와 같은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준비된 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집회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 투표는 실제로 목소리를 내거나 서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다소 과장하여 '3초 만에 할 수 있는 주권 행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중 일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하여' (2019.5.19.실시)- 찬성(34), 반대(135), 어느 쪽도 아니다(7)
-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하여' (2022.9.19.실시)- 찬성(18), 반대(102), 어느 쪽도 아니다(5)

마지막으로 가두행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집회와는 별도로 JR 오후나역 앞과 상점가를 행진하며 쇼퍼백과 행인들에게 '9조 개헌 반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제15회 가마쿠라 가두행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전쟁 준비가 아닌 평화의 준비를! '새로운 전쟁(新しい戦前)'에 나서지 말라!』이며, 부제로는 『군비확장보다 민생이 우선! 9조 개헌 NO! 전쟁을 부추기지 말라! 외교-대화가 평화의 길!』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는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행진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참가자는 50명 정도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사적 배경(조금 길어졌습니다만)과 저희 단체가 탄생하게 된 계기, 활동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이를 지탱해주는 시민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멀리서나마 응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저희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9월 일본 오후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전환하라!”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지도부 12명 단식농성 이어가
2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은 정규직화 약속,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원주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진행된 파업 첫날 집회에는 조합원 1천 600여 명 중 1천여 명이 참여하여 공단 고객센터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다. 파업이 시작되던 11월 1일 아침,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소속 조합원 80여 명도 큰 배낭과 침낭을 짊어지고 2박 3일 원주 본사 앞 투쟁의 길에 나섰다.

기업과 공공기관,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업무 안내와 서비스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담노동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필수서비스로도 격상됐지만, 실제 상담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시시때때로 쏟아지는 폭언과 성희롱을 감수한 채 목표 콜 수를 채워야 하고, 휴일이나 휴계시간을 갖기조차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위탁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을 벗어나기도 어려운 데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하고 여러 정책연구 전문가들이 ‘간접고용’을 문제로 삼고 있으나 해결은 더디기만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은 “우리는 온갖 폭언과 모멸적 비하를 감수하고 목표 콜 수, 강제 콜 수만 채우는 기계가 아니다. 수십 년 일해도 진짜 사장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절규하고 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5년이 지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대책이 제시됐음에도 현상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 고객센터도 여전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후 공



단은 2021년 10월 '민간위탁 사무 논의협의회'를 통해 상담사들을 공단기관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담사들은 여전히 민간위탁 소속이다. 4대 보험 수행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들이 오래전 정규직화 된 것과 비교된다.

지난 10월 26일 나온 공단의 첫 제시안은 고용안정을 흔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단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 발표 시점인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들을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통해 공개경쟁 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들은 지난 9월 말 기준 700명이다. 그 이전의 입사자들(993명)은 전환채용 대상이다.

노조는 공단의 제시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만 끌다가 하다가 이제 와서 4년이 넘는 숙련 노동자들을 '무자격자' 취급하며 700명을 해고하려는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일 소속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채용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원주 본사 앞에서는 지회별 순환 투쟁과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2명의 무기한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자들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공단은 지난 3일 지부 조합원 400여 명을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



거침입) 등으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소속 조합원 80여 명은 11월 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원주 본사 앞 투쟁에 이어 11월 둘째 주부터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류네거리 인근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아세아극장과 로봇 태권브이의 추억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오래전, 나는 마당 기타¹⁾ 우물이 있던 집에 살았다. 모든 것이 흑백이었던 시절 그다지 세상 무료함은 없었지만, 고뇌로 점철되었던 나의 여덟 살 이전의 삶은 흑백의 기억만이 존재했었다. 여하간 나의 여덟 살이 반쯤 지나던 여름,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자리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 고민 많던 유년의 그해 여름, 나는 하나의 극장 포스터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거슨’ 바로 극장 포스터에도 또렷하게 명시된 ‘총천연색’ 장편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를 만나게 된 것이다.

충격적인 비주얼,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던 그 아름다운 갈라, 한국 최초의 로봇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는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칠성시장 철독 인근 어느 골목이 세상 전부였던 한 소년이 드디어 총천연색 컬러의 삶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게 되었고 오늘날 그림을 그리게 된 삶에 있어서 큰 동기가 되었다.



▲ 장편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 극장 상영 포스터

그러나 당시 내 의지와는 상반되게 ‘텔레토비’ 만한 사이즈였던 나는 경제적 독립을 누리지도 못했거니와 아세아극장은 멀고도 먼(지금이야 멀어가지도

1) 기타: '귀퉁이'의 경상도 방언

사십 분 내 거리건만) 이방인의 지역이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북성로와 향촌동을 걸어 중앙공원(현 경상감영공원: 당시 입장료 30원)도 가보았건만 그 앞에 자리한 아세아극장은 바벨탑과도 같은 오르지 못할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나의 부모님은 2주간에 걸쳐 피력한 나의 신념을 수긍했는지 며칠 뒤 아들인 나의 양손을 잡고 그렇게 아세아극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지금처럼 정보가 없던 시절이라) 영화는 이미 하루 전에 막을 내리고 다른 프로를 상영하고 있었다. 그 허망함을 어떻게 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야시꾸리한²⁾ 아줌마가 상의를 반쯤 내린 채 시뻘건 입술 내밀며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날의 극장 간판 그림이 그렇게나 처연(凄然)할 수 없었다.



▲ 로봇 태권브이 신문광고(1976)

한낮의 극장 앞은 아우성이었다. 삼삼오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님들은 애꿎은 매표 아저씨를 향해 성토했다. 아니 그것은 항의였다. 한국 3대 민중항쟁인 시월항쟁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1980년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에 항거했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읍소를 가미한 귀여운 항쟁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소박한 시절, 순진한 어른들, 사뭇 진지한 아이들은 그날 작지만 큰 승리를 쟁취하였다.

한국 극장 史 유례없이 새로운 개봉작을 걸자마자 내린(요새 세상이면 이게 말이나 될 일인가?) 행태에 항거하는 아이들의 투쟁(!)과 멋쩍은 부모들의 요구에 힘입어 이번에 한해 1회성으로 로봇태권브이를 재상영해주기로 즉석에서 합의를 본 것이었다. 그래봐야 극장 앞에 모인 서른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전날 막을 내린 로봇태권브이를 다시 상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야시꾸리: 야시꾸리하다 - 분위거나 생김새가 야한 느낌이 있다



▲ <외롭다> 김병호 작(45세 무렵, 술집에서 혼술하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그리다)

극장 안,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은 승리자였지만 그날 소중한 결단을 내려준 당시 아세아극장 관계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이제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총천연색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가 시작되며 영화의 주제가 시작될 무렵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도 당시의 그런 벽찬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영화는 그렇게 나의 흑백시대에 안녕을 고했고, 미래의 컬러시대를 영위하게 하였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며 세월이 조락하고 무심하게 인생이 흘러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보내야 한다(사실 많이 늦었다). 아무튼, 나의 로봇 태권브이여. 그 벽찬 감동이여, 이제는 안녕! 그리고 늦게나마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나의 로봇 태권브이, 그동안 내 추억 속에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젠 너를 놓아주려다. 진심으로 레알 핑큐 쏘 마 치!”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차우미 (사)생명평화아시아 이사

최근까지도 여성이 남성에 의해 심각한 폭력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이유로 한국인 남편에 의해 폭행당해 뇌사상태에 빠지는가 하면(경남뉴스.2023.10.18.), 50대 남성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며 10대 여성을 길에서 폭행한다(뉴스1.2023.10.31.). 20대 남성은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뉴스1.2023.11.07.), 중학생이 늦은 밤 40대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뉴스1.2023.10.18.)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소식도 뉴스에서 끊일 날이 없다.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은 142억이나 삭감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약자 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 복지'에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리를 없앤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말하였지만, 이는 일반예산 및 양성평등 기금 예산의 삭감액 431억 중 33%의 비율이나 차지하는 액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순을 보였다. 잼버리 파행과 책임질 줄 모르는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동의하였다. 주식 파킹 의혹을 비롯해 노골적인 여성혐오 조장으로 큰 이익을 얻어 비판대에 올랐던 인터넷 언론의 대표를 지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낙마하기를 했지만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여성가족부 해체의 선봉장이 되려고 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는 효율성을 이유로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라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 이탈 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을 모두 삭감되었다.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성평등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실적과 효율을 따지는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피해자의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도 삭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다. 여성가족부는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를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실질적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또한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다. 이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예산을 삭감당한 영역이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지원’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질적 예산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이해하는 구조적 맥락에서 의료, 상담, 치유 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기존의 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개편할 수 없거나 통합상담소가 없는 곳에서도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으로 어떻게 피해자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5,6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적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정보와 민감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서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라며 내년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의 대부분을 없애 버렸다. 예산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느냐는 것은 현 정부의 방향을 보여 주는 데이터이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동안 힘겹게 이루어 온 성평등 사회와 인권 감수성을 명백히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상 현재 12억인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으로 삭감했다. 이마저도 전국 8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담당자 1인을 채용하여 고용평등상담실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2024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 지원'으로 바꾼 뒤 54.7% 삭감한다고 한 것이다. 여성노동과 여성의 경제 자립 및 직장에서의 차별 해소 등의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서 운영 하던 고용평등상담실 인력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1명만 지원을 받다가 2022년 겨우 1.4명으로 늘었다. 수많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과 재생산, 괴롭힘 상담을 받 토막 내겠다는 것이다.

고용평등상담실 예산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예산" 역시 삭감되었다. 정부는 지금 거의 모든 공공 인프라를 삭제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 명목의 예산으로 상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만 지급할 수 있는 초저예산을 지원해 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을 거처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성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어딜 가나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 고용평등상담실을 찾는다. 그런 조건의 노동자들에게도 고용평등상담실은 든든한 상담자이자 지원군이 되었다.

매년 발표되는 국가성격차보고서에서 가장 성별 격차가 크고 뒤처지는 영역은 경제적 참여기회 영역이다. OECD 국가 중 만년 꼴찌인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지수,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낮은 출생률, 여성노인 빈곤율 등 무수한 지표들이 여성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 지수들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성차별 구조이다. 그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안전하게,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공적 시스템이 외면한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 공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거나 계속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사각지대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왔다. 그동안 공적 시스템의 공백을 발견하고 매우면서 공적 시스템의 개선을 견인해 온 곳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었던 것이다.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곁을 지키며, 공적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국민의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인권이 보장되며 누구든 차별받지 않는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향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 부부가 외교를 빙자해 거의 매달 해외순방으로 600억 가까이 되는 국민 혈세를 쓰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여성 노동자, 청소년 등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하는 국민의 삶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예산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청년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성급한 말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국민연금 이야기가 뜨겁다. 이대로 가면 2054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되어서 지급할 수 없단다. 보험료를 올린다가, 소득대체율을 조정한다거나, 수급 연령을 조정한다거나 같은 이야기만 끝없이 나오고 있다. ‘고갈’이라는 불안한 말을 하며 ‘개혁’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 불안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내용이다.


예산과 기금은 다르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뜻한다. 특히 일반회계의 재원 중에는 세금이 포함된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를 하고, 재정적립이 가능한 돈주머니로 봐야 한다. 따라서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기금으로 가게 된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간다.). 흔히 세금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세금이 아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일 뿐이다.

현 국민연금 체계의 문제점은 바로 세금을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바로 그 ‘고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다. 국민연금에는 왜 투입하고 있지 않을까. 바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1~2%만 국민연금에 투입해도 고갈 문제는 영영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취급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라서가 아니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어떨까. 2017년 기준 OECD 국가에서 공적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닌 평균 18.4% 절반 정도인 9.4% 수준이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미국 (18.6%)와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지금 수준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현재 보험체계를 조정하는 정도일 뿐이다. 그것이 개혁인가. 따지자면 보험 가입에 있어서 약관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닌가. 그것도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수정 말이다. 이런 걸 가지고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개혁이라는 말을 하려면, 현재 공적연금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국고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회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법이 공론화조차 되고 있지 않은 건 유감이다. 심각한 문제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다. 선택지를 하나만 달랑 던져주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보여주지 않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고 봐도 좋을 거 같다.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예산은 국민의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인권이 보장되며 누구든 차별받지 않는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향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 부부가 외교를 빙자해 거의 매달 해외순방으로 600억 가까이 되는 국민 혈세를 쓰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여성노동자, 청소년 등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하는 국민의 삶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예산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날개 달기

2023년 9월~10월 마음 주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애쓰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박경로 대표 운영위 엠티 경비 지원
이두옥 대표 운영위 엠티 경비 지원
엄창욱 대표 운영위 엠티 경비 지원
이승연 운영위원 운영위 엠티 숙소 지원 / 활동가 간식 지원
이종득 운영위원 운영위 엠티 먹거리 지원
김성수 회원 운영위 엠티 먹거리 지원
오규섭 전 대표 운영위 엠티 강연 지원
김균식 회원 활동가 간식 지원
정해숙 대표 활동가 추석선물 지원
문창식 운영위원 활동가 추석선물 지원
류영준 운영위원장 활동가 추석선물 지원

[신규회원]

9월: 안원기 이은미 이종희 / 10월: 최유정 권용현 이금태 회원님 반갑습니다.

대구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보험처럼 의료사고보험도 필요하다

환자와 의료계 모두를 위한 제도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2020년 1월 20일에 처음 확인된 후 누적 확진자 수가 국민의 절반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무사했다. 정년 퇴임한 처지여서 사회적 접촉이 별로 없었고 정부에서 맞으라는 백신도 다 맞은 덕일 것이다. 그러다가 22년 10월 충수염(속칭 맹장염)으로 대구의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술 후 1주일 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병원 측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코로나19 양성 이 나왔다고 알려주었다.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보호자는 외부 출입을 못 하고 병동 내에서 상주해야 했다. 그런데 필자는 수술 직후부터 보행도 가능했고 식사 등을 혼자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보호자 없이 혼자 지냈다. 의료진 외의 다른 사람과 접촉한 일도 물론 없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니, 아주 당황스러웠다. 바로 퇴원을 요청하고 집에서 1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원내 감염은 누구의 책임일까?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규칙을 다 잘 지켰는데도 감염되었으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 병원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장 2주일이므로 입원 시 음성이었다고 해도 원내 감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학자로서 좋은 사회제도를 위해 연구해온 필자는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이런 의료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지 탐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병원 측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았다. 병원 측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본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 본부 지침과 본원의 코로나19 지침을 근거로 하여 원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내 보상 절차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원내 감염에 대한 조치 사례는 없었다. 환자의 코로나19 확진의 경위와 병원 측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즉, “병원 측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병원이 환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병원 측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은 환자, 병원, 제3의 기관 중 누가 하는 것이 좋은 제도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문의하였다.

‘병원 측의 답변에는 귀책사유가 병원 측에 있음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 병원 사정이나 의료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 측에 입증책임을 지운다면 환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제도가 아닐까? 또 원내 감염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문의하였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정책이 있는지.’

이 민원은 그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구지역 보건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요약하면 이렇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을 이행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답변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찾아보았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도중 사망했을 때 의료사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끊어오르자 개정되어 ‘신해철법’이라는 별명이 있는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




▲ 대구의 한 대학병원 외래 접수·수납창구와 응급실 ©평화뉴스

있다(제27조 제9항). 즉,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부분의 의료사고에서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있으나 이것도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일 뿐이다.

산재보험처럼 의료사고보험을 도입하자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원칙’을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나 필자가 겪은 사례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환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원칙’도 제도화되어 있다. 잘 알려진 예는 사회보험의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이다.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참고하면 의료사고 보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일반 국민이 부담하고 그 혜택은 진료비 급여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에 의료사고보험을 추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중재원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좋겠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처럼 의료기관이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의료기관의 수입이 의료수가 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사고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면 의료계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다. 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평화뉴스에 2023년 9월 4일자로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위안부’ 운동 30년 (2)



양정자 희망의 씨앗 기금 대표이사, 재일교포 2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위안부’ 문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대협은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에서 결의안 채택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한편, 한국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내게 된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도 “설마 이길 줄 몰랐다”며 놀랄 만큼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한국 정부는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간 협의가 물밑에서 시작하려는 가운데 2011년 12월 수요일이 1천 회째를 맞이한 것은 연일 큰 화제가 되었고, 시위 당일엔 한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수천 명 규모로 모였다. ‘아직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당시 한국 시민들이 털어놓은 솔직한 소감으로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생존자들과 정대협 운동이 다시 한번 재조명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수요일이 1천 회를 맞아 외무성을 인간사슬로 둘러싸는 등 전국적으로 연대 행동이 진행되면서 운동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인권운동가가 된 생존자들

사람들이 있고 있는 사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운동을 펼치던 생존자들은 그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험을 거듭하면서 생존자들은 피해 회복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또 수요일 시위 현장에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계에는 여전히 분쟁이 있고 전쟁 중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존자들의 표정이 바뀌고 발언 내용도 달라졌다. 자신의 경험을 사회와 연결하고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변해갔다.


2012년 3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물밑 협의가 시작되면서 생존자 김복동, 김원옥 할머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배상금을 받으면 지금도 전시에 고통받는 각지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모두 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대협이 발족한 ‘나비기금’은 콩고, 우간다, 나미비아 등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했고, 베트남 전쟁 당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 1천 회째를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축하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시 한국군의 성폭력을 당한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는 생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2015년 ‘한일합의’라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이다. ‘한일합의’ 당시 생존자는 65명이었지만, 모두가 운동을 함께한 것은 아니다.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피해자들이 더 많았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투쟁한 생존자들, 그로 인해 크게 변화해 인권운동가가 된 생존자들은 오히려 소수였지만, 이분들에게 ‘한일합의’는 굴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 해결(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비판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내세운 한일합의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기억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합의였기 때문이다.

이제 생존자는 극소수가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만큼이나 상처받은 타인에게 마음을 다독이고 자신이 겪은 피해가 다시는 다음 세대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온몸으로 호소하는 생존자들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나는 나의 기억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것이 ‘기억의 말소’를 꾀하는 권력에 대한 내 나름의 저항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운동’ 연표

일 자	주요 내용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고발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포함한 한국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 도쿄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1992년 1월 8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차 수요시위 개최
1월 11일	아사히신문, 군의 개입을 보여주는 공문서(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씨 발견) 게재
1월 13일	일본 가토 관방장관 ‘군의 관여는 부정할 수 없다’,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7월 6일	일본 정부의 1차 자료 조사 발표, 가토 관방장관 담화
8월 8일 ~ 26일	정대협,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첫 참가, 14일 부대행사에서 황금주 할머니 증언
8월 10일 ~ 11일	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 연대회의 개최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 2차 자료 조사 발표, 가와노 관방장관 담화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 총리 담화
1995년 7월 19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1997년 1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2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발족
2000년 12월 8일 ~ 12일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 도쿄에서 개최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 사죄와 교육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 채택, 네덜란드 하원, 캐나다 하원, EU 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채택 잇따름
2008년 3월 28일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 내 최초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 이후 일본 전국 40여 개 도시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서 채택
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
12월 14일	수요시위 1천 회를 맞아 세계동시연대행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2012년 3월 8일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의 제안으로 정대협,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설립
2014년 5월 31일 ~ 6월 3일	도쿄에서 제12회 아시아 연대회의 개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을 채택하고 해결을 위한 길을 제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 발표
2016년 7월 28일	한국에 ‘화해-치유재단’ 설립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7월 31일	한국 정부, 한일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설치
12월 27일	한일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2018년 1월 9일	한국 외교부 장관, 새로운 방침(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 ②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음 ③ 일본이 자발적으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 발표
2019년 7월 5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구참여연대 소식지 「함께 꾸는 꿈」 제145호의 p.30~31에 걸쳐 게재된 일본군 위안소 지도(日本軍慰安所マップ)는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의 제공으로 실린 것으로 온라인판 소식지에는 일본측 저작권 보유자인 wam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링크만을 제공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am-peace.org/ianjo/>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大邱参与連帯ニュースレター「함께 꾸는 꿈(共に描く夢)」第145号のp. 30~31に掲載された日本軍慰安所マップは、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の提供で掲載されたもので、オンライン版ニュースレターには日本側の著作権者であるwamの要請により、以下のリンクのみを提供することをご了承ください。

<https://wam-peace.org/ianjo/>

(C)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장지혁 전. 정책부장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평소 자주 뵙긴 하지만 ^^ 그래도 오랜만에 지면으로 만나는 회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지혁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계시죠? 다들 건강을 우선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정리하고 요즘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죠?

정리했다기보다는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약에 의존해 지내다보니 컨디션도 그렇고 업무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중단하게 된 거구요. 그러고도 완전히 폭 쉰 건 사실 몇 달 안 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91년 열사 투쟁 30주년 사업도 했고, 개인적인 활동을 계속하다가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으로 오게 된 거죠. 뉴페이스가 시민운동을 해야 하는데 저도 이제는 올드스쿨로 구분되는 세대의 사람이라 좀 힘들긴 하네요. 애들은 코로나 시기를 무난히 잘 통과하면서 이제는 각자 아침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침 되면 서로 헤어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 같이 만나고 합니다. 요즘은 참여연대에 있던 시절보다는 최대한 건강관리를 해가면서 이모저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요약하면 그게 다 선배들을 잘못 만나서인데.(웃음) 지금은 남구에서 감자탕집을 하는 김성수 선배가 술자리에서 참여연대에서 사람을 구한다, 혹시 관심이 있냐 해서 만나게 해주었고,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여연대가 존재감이 엄청 클 때라 당시의 몇몇 자리에서 “아! 우리도 운동이라는 것은 저렇게 해야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선

망의 조직이었고, 그런 단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영광임과 동시에 그런 곳에 내가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 자신감 부족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하게 된 거죠. ㅎㅎ

10년 동안의 참여연대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요?

뭐 많죠. 그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는 한데, 안전한 지하철 3호선 만들자고 3호선 예정지를 걸으면서 비 맞은 적도 있었고, 사드 막으러 간다고 밤 12시에 긴급히 활동가들 호출했는데 다 모여서 차 타고 달려가던 기억도 있고, 강금수 사무처장님이 정책기획사업 하자고 해서 수천 페이지 자료 인쇄해놓고 밤마다 비교, 검토하던 기억도 있고, 시기별로 각종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지면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렇다면, 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정책이 있다면?

예산서 공개 문제죠.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는 시기인데, 이게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공개해야 하는데 하는 곳이 울산 정도 빼놓고는 하는 데가 없거든요. 물론 거기도 행정심판 등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시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하나인데다 예산안을 미리 보고 의견을 내고 하는 과정도 하나의 주민참여 과정인데 그런 기회가 철저히 봉쇄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뭐랄까 재정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활동기간의 뒷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대!

아, 이걸 진짜 지면으로 써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선 안 될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건 좀 제외하면 재미가 좀 없긴 하지만.... 제가 2014년에 결혼할 때였는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다녀왔더니 박인규 전 사무처장님이 동네로 부르더라고요. 대뜸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이 얼마 남았냐"고 묻더니, 그 돈을 동구의 모 단체의 출자금으로 내라고 해서 다 낸 적 있었고요.(ㅠㅠ) 2018년이었나 2019년이었나 올해는 무조건 안식월 쓰라고 해서 가장 일이 적은 여름에 쓰기로 했는데 강금수 사무처장님이 가을에 책 내야 한다면서 7대 광역시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자더라고요. 낮에 출근은 안 하고 밤마다 사무실 나와서 조례들 뽑아 놓고 비교분석하던.... 이게 안식월인가 아니면 밤에만 출근하는 올빼미인가 고민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써놓고 보니 다 사무처장들이 나뻐네!! ㅎㅎㅎ

지면으로 못하는 이야기 나중에 비사로 꼭 들어볼 기회가 있기를! 그리고 동구 모 단체에 출자한 출자금, 꼭 배로 회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한창 후원금 모금 행사 중입니다. 활동가로 있을 당시, 재미있었던 모금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아! 다른 건 아니고 2016년인데요. 이때 11월 25일인가? 이때쯤 후원 호프를 하자고 준비를 했는데 한창 준비 중이던 10월에 최순실 태블릿이 발견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이게 주말도, 밤낮도 없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참여연대, 이렇더라,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어찌 되는 방향이든 그건 사무처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걸 제일 잘 아는 건 지금의 활동가나 임원, 열심히 참여하는 회원들이거든요.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걸 물으면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방향성이라는 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거라서 ㅎㅎㅎ

인터뷰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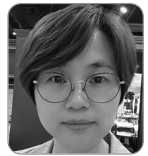
원래 제 꿈이 지구의 크기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국대륙횡단이라던지,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려본다든지, 아르헨티나 자동차 여행, 유럽 100일 가족여행 등등인데... 살아 있을 때 뭐라도 하나는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요런 리스트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과 지평선 사이에 있으면 지구의 위대함, 우주의 크기, 나 자신의 왜소함, 겸손함 등등 수많은 감정이 밀려오거든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욕심도 생기고 다른 측면에서는 욕심이 없어지게 되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문화재 같은 거에도 조금 관심이 생겨서 지금 남아있는 인간 문명(?), 역사의 흔적을 보는 것도 좋아서요. 언젠가는 가능하겠죠(웃음)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 윤 상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대구참여연대 회원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상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됐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개성입니다. 1976년에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로 와서 40년 넘게 재직하다가 2015년에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식지에 고정 칼럼으로 뽑고 있기도 한데요, 정년퇴임 후 근황은 어떠신지요.
평화뉴스에 기고를 하고 있고, 이를 또 소식지에 재편집해서 싣고 있습니다. 제 글이 더 많이 읽히게 되어 글쓴이로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정년 퇴임하고 석좌교수로 잠시 이름을 올려두긴 했고 별로 하는 일 없이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 같은데 질문지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간 책을 여러 권 냈더라고요. 단독저서 3권, 번역서 2권, 공저 6권, 논문집 여섯 편에 칼럼은 100편 이상을 기고했구요.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없었는데 나름 바쁘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강의도 나가고 하는데 강의가 없을 땐 주로 동네 산책을

하고 산책하며 하모니카도 불고 있습니다.
중국어 공부도 했네요. 대화는 못해도 중국어 간판이나 신문 정도는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시 동네 주민 센터에서 하는 강좌를 듣고 시작했지요. 중국어가 우리나라 문법과 큰 차이가 없어서 생각 외로 배우기가 쉬웠어요. 영어보다 쉬워요.

중국어 배우시는 김에 중국 여행도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여행은 그냥 가게 되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나라 많이 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몸만 피곤할 뿐 여행을 통해 재충전하면서 뭔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걸 깨닫는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그저 여행은 다녀왔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고.(웃음)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 하모니카를 부는 거, 엄청 낭만적인 거 같아요. 지난 흠커밍데이 때 선생님께서 멋들어지게 하모니카를 연주해주셨어요. 따뜻한 봄날 저녁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요, 특별히 악기를 취미로 하게 된 계기, 악기를



다루면서 느끼는 좋은 점이 있다면요.

어릴 때 작은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한 번씩 휴가를 나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고 했거든요. 삼촌이 그때 하모니카를 우리 집에 선물을 하고 가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저 하모니카로 동요 연주하곤 하다가 잇고 살았죠. 대학 때는 악기를 하나 하고 싶어 통기타를 배우기도 했는데 손재주가 없어서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은퇴 전에 다들 퇴직하면 뭐 하나 악기라도 하나 배워라, 이런 얘기도 듣고, 작은형이 의사인데 아무래도 나이 들면 폐활량이 중요하니까, 폐활량에 좋은 하모니카 괜찮겠다 하시길래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해서 하모니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중급반까지 배웠고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이제 혼자서도 MR¹⁾ 틀어두면 악보 보고 볼 정도는 되니까 배우러 안가도 될 정도예요. 산책하면서 그냥 걷다보면 심심하기도 하고, 작은 가방에 늘 하모니카를 넣어 다니는데 걷다가 한 번씩 불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휴대폰에 단조 장조 바꾸는 앱에 MR도 넣어두고……. (선생님의 휴대폰 앱을 확인해보니 60곡 이상의 MR이 들어 있습니다.^^)

소소한 인연이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참여연대와 행사도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모임기피증’(웃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지 않는데 2009년에 대구참여연대에서 ‘화요 사랑방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나를 평화뉴스 기고글에서 봤을 수도 있겠고, 공동대표였던 김민남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시민을 위해 내 전공 분야를 알기 쉽게 풀어 강의해달라고 해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 같고 이때부터 김채원 전 팀장과 강금수 처장, 박인규 전 처

장도 연락을 해오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어서 적극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뭘 하지는 않았지만,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 오고 있어요. 간간이 참여연대에서 토크콘서트라든가, 민주시민학교에서 강연도 했었네요. 2017년도였던가, 공동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나처럼 소극적인 사람이 대표를 맡아서는 일이 잘 안될 거 같아 고사를 했고, 그럼 자문위원이라도 되어 달라고 해서 이제까지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네요.

시민학교 강의도 하셨고, ‘체인지 대구’ 공동대표 활동도 하셨습니다. 여러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사람이 있다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화요사랑방교실에서 강의했던 내용으로 함께 강의하던 여러 강사들과 함께 ‘행복 경제 디자인’이라는 책을 출판했었는데 참 의미 있었던 일이었고, ‘체인지대구’ 공동대표는 당시에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새로운 선거 운동이었는데, 성격상 별다른 기여도 못할 것 같았지만 권유를 뿌리치지는 못했어요. 그 때 대구 시민사회의 다른 활동가들과 면식을 조금씩 넓히게 되었는데 참여연대가 아니었다면, 그런 인연들은 아마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연대 시민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경제디자인’이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토지공개념에 대해 많은 강의도 해오셨는데 토지공개념, 지공주의란 말도 선생님께서 처음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원들에게 지공주의가 무엇인지 짧게(가능 할는지 모르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공주의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지공’은 ‘토지공개념’에서 두 글자를 딴 것입니다. ‘개념’이라는 표현

1) MR (Music Recorded) 이란 노래반주 및 연주를 감상을 목적으로 가수의 목소리가 빠진 연주만으로 제작된 음원을 말한다.

은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대신 '주의' 라는 다소 고급진(웃음) 표현을 사용한거죠. '토지를 비롯한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죠. 지공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회주의다, 하는데 토지는 공유고 자본은 사유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지공주의 내용이라 사실 지공주의는 곧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권 없는 세상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토지소유도 결국 특권이예요.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노력, 운, 그리고 두 개가 합해진 능력이예요.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가지 더 '특권' 이 있다고 보는데 특권을 취득하는 데는 노력과 운이 작용하지만, 특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도 없고 생산한 것도 없이 뭔가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권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을 학술용어로 '지대' 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지대를 공유하면 된다, 땅 주인도 돈을 내고 써라, 거기서 나온 돈으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를 실천하는 거지요. 땅을 단순히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것을 가져가야 그게 자본주의고 진짜 시장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웃음)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이라는 전공서를 내기도 했는데 여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참여연대 회지에 실렸던 선생님의 글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 라는 글을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여전히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 핵심을 아우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 특별히 마음을 찌르는 구절은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감시자를 감시하는 깨어있는 시민', 이라는 수식어구가 참 와 닿았습니다. 참

여연대 고문으로서 혹은,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이름의 감시자의 감시자로서^^ 대구참여연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그리고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라틴어로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라고 하는데 흔히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라고 번역합니다. 시민단체라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시민단체의 지원과 감시를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이 기대만큼 많지 않고 설령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힘들게 살다 보니 지원과 감시를 할 여유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에 시민단체 지원과 감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해봅니다. 국회처럼 선거로 구성하는 대의기관 외에 일반 국민 중 추천으로 선발하는 대의기관을 병립시키자는 제안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보통의 안건은 직업 정치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의회에서 처리하되 국민의 상식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 안건, 정당 간 의견이 심히 엇갈리는 안건,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은 추천의회에서 다루자는 것입니다. 추천의회와 가까운 예이기도 한데 추천의회가 실현되어 그 산하에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도 두면 좋겠어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개혁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 시작되는 거죠.

인터뷰 중 하모니카 이야기를 하다가 즉석에서 한 곡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영화 미션의 OST 중에서 '가브리엘 오보에' 벨라 판타지아의 한 소절을 연주해주셨는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곡으로 회원들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조만간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9~10월 활동소식)

- 10.31 [공동기자회견] 국민은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보 즉각 개방하라! - 낙동강네트워크
- 10.30 [청년기획] 청년 정책 예산 공부 모임 2차
- 10.27 [회의] 전세사기대구대책위 회의
- 10.27 [성명] 신청사 이전의 독선과 혼선, 홍준표 시장 사과하라
- 10.26 [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 회의 - 온라인
- 10.23 [청년기획] 청년 정책 예산 공부 모임 1차
- 10.23 [논평] 국정감사, 대구시만 생중계 안해! 문제 있다
- 10.20 [기자간담회] 대구시 기자에게 대구참여연대를 묻다
- 10.19 [시국좌담회] 현 시기, 대구경북 무엇을 할 것인가 - 대구경북시국좌담회준비위
- 10.16 [토론회] 공공의료토론회 - 지역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새로운공공병원설립 대구시민행동
- 10.17 [성명] 대구시의회, 교섭대상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 지출 문제 있다
- 10.13 [성명] 유엔인권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구북구청의 거짓소명을 규탄한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인권행정을 시행하라!
- 10.12 [회의] 10월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 10. 6 [연대행사] 10월항쟁 77주기 가창 위령제 및 대구경북시도민대회 참석
- 9. 26 [공동성명] 대구시의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 호도 문제 있다
- 9. 20 [성명]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고위직의 공공시설 사용 특혜 비판
- 9. 20 [연대행사] 대구기후정의행진 -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 9. 16 [회원조직사업] 운영위원 엠티 - 청도
- 9. 16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대구로페이 전자카드 발급대상 65세 이상 시민으로 제한한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출 - 대구경실련 공동
- 9. 13 [공동기자회견] 금호강 팔현습지 영터리 환경영향평가 강력 규탄 기자회견 - 금호강 난개발저지 대구경 북공동대책위
- 9. 7 [기자회견] 대구형 배달 플랫폼 '대구로' 특혜 불법문제 설명회 및 고발 기자회견
- 9. 5 [공동성명]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9. 5 [성명]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 대구시 감사위원회 전면 감사 촉구
- 9. 1 [연대기자회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당연직 이사 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 기자회견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9. 7 [기자회견] 대구형 배달 플랫폼 '대구로' 특혜 불법문제 설명회 및 고발 기자회견



9. 16 [회원조직사업] 운영위원 엠티 - 청도



9. 20 [연대행사] 대구기후정의행진



10.12 [회의] 10월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10.23 [청년기획] 청년 정책 예산 공부 모임 1차



10. 6 [연대행사] 10월항쟁 77주기 가창 위령제 및 대구경북시도 민대회 참석



10.20 [기자간담회] 대구시 기자에게 대구참여연대를 묻다



10.31 [공동기자회견] 국민은 미루다가 아니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보 죽각 개방하라! 네트워크

2023년 9,10월 본부 재정운용결과

수입					지출						
항목	2023년 9월	2023년 10월	비율	항목	2023년 9월	2023년 10월	비율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515,000	655,000	4.1%	인건비	급여	7,531,740	7,531,740	55.3%		
	CMS회비	7,295,000	7,402,000	46.8%		사회보험료	797,020	805,140	5.9%		
	연회비	-	-	0.0%		상여금	1,200,000	-	0.0%		
	평생회비	-	-	0.0%		퇴직급여	-	-	0.0%		
	소계	7,810,000	8,057,000	51.0%		소계	9,528,760	8,336,880	61.3%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660,000	150,000	0.9%	일반관리비	장기차입금상환	560,414	560,881	4.1%		
	사업후원금	-	-	0.0%		지급이자	3,747	3,280	0.0%		
	청년활동기금후원금	300,000	-	0.0%		사무실임차료	800,000	800,000	5.9%		
	해피빈모금	42,400	-	0.0%		정보통신비	173,789	172,141	1.3%		
	후원행사	-	7,400,000	46.8%		사무용품비	74,710	59,200	0.4%		
소계	1,002,400	7,550,000	47.8%	소모품비	20,000	14,000	0.1%				
기타수입	광고수입	-	-	0.0%	냉난방비	-	-	0.0%			
	이자수입	240	-	0.0%	도서구입비	20,000	20,000	0.1%			
	기타수입	200,000	200,000	1.3%	지급수수료	78,033	76,353	0.6%			
	소계	200,240	200,000	1.3%	수도광열비	-	65,210	0.5%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1,000,000	-	0.0%	기타경비, 세금	151,100	3,000	0.0%			
	명절수익사업수익	-	-	0.0%	소계	1,881,793	1,774,065	13.0%			
	기타사업수입	-	-	0.0%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276,450	-	0.0%		
	하계캠프수입	-	-	0.0%		소식지제작비	-	-	0.0%		
소계	1,000,000	-	0.0%	기타홍보비		-	-	0.0%			
소계	1,000,000	-	0.0%	소계		276,450	-	0.0%			
차입금	단기차입금	-	-	0.0%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70,000	120,000	0.9%		
	장기차입금	-	-	0.0%		일반사업추진비	538,000	240,600	1.8%		
	소계	-	-	0.0%		회원조직사업추진비	646,400	313,000	2.3%		
합계	수입합계	10,012,640	15,807,000			후원행사비용	-	2,478,850	18.2%		
	전월이월금	6,509,437	3,321,674			하계캠프비용	-	-	0.0%		
	총계	16,522,077	19,128,674	100.0%		명절수익사업비용	-	-	0.0%		
						청년활동기금사업	-	-	0.0%		
						소계	1,254,400	3,152,450	23.2%		
						지원경비	동구주민회교부	250,000	250,000	1.8%	
						소계	250,000	250,000	1.8%		
						미지급	미지급금	9,000	96,520	0.7%	
						순지출총계	13,200,403	13,609,915			
						월별 수입지출차액분	- 3,187,763	2,197,085			
					통장 잔액	3,321,674	5,518,759				
					총계	16,522,077	19,128,674	100.0%			

9월 재정 내역			10월 재정 내역		
수입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40건 / 일반후원금 2건 / 운영위임티3건	수입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51건 / 일반후원금 2건
	CMS 회비	483건		CMS 회비	478건
	해피빈수입	공익소송 해피빈 모금 수입		후원행사수입	19건(박경로외)
	일반사업수입	일본시민활동가강연회분담금(의정참여센터)		일반사업수입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외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외
지출	사회보험료	8월분 사업자부담분	지출	사회보험료	9월분 사업자부담분
	장기차입금상환	9월분상환/ 이자비용 지급		장기차입금상환	10월분상환/ 이자비용 지급
	정보통신비	금융결제원, 인터넷, 전화		정보통신비	금융결제원, 인터넷, 전화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10월항쟁 77주기 분담금
	일반사업추진비	대구로페이 고발 등 이동민변호사 지원/ 기자회견견학수막		일반사업추진비	기자간담회현수막, 도시락
	회원조직사업비	오즈메일리이용료/ 운영위임티/		회원조직사업비	오즈메일리이용료/ 운영위임티/
	기타경비	회비반납, 공익소송비용반납, 경조사비		후원행사비용	국립중앙박물관 답례품 구매 / 기업체 단체 우편발송

※ 회원 · 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박근식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은수 강재기 강준구 강진효 강현구 경라운 고영문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광연하 광이화 광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구형 권기동 권기혁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 권상구 권석우 권영래 권영태 권옥자 권추경
권택홍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후선 금상렬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광석/이혜영 김규엽 김규중 김기용
/김선희 김나영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식/박원영 김동용 김동창 김동현 김명환 김무탁 김미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서
김민재 김 배 김병욱 김병하 김병혁 김병호 김보성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 삼/한효정 김상숙 김상호 김석수 김선우 김선주 김선희
김성구 김성섭 김성수 김성택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록 김영문
김영숙 김영아 김영일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윤상 김은경 김인하 김일수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정희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옥 김주현 김준호 김지연 김지일/박선영 김진숙 김진환 김채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효정 김효주 김희섭 김희운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연푸드) 노태맹 노형석 도경화 도교동 도근환 도영주 도운백 류덕제 류소정 류영준 류영철 류지호 류태하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문창식 문혜선 민정식 민혜진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찬 박금동 박대희 박덕환 박명리 박명호 박선우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희 박영복 박옥순 박완슬 박은경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지용 박지운 박찬문 박찬미 박찬영 박창호 박창진 박현탁 박호석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승대 백차흠 변영숙 변화진 서덕교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명순 손상호 손성봉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성범 송운식 송혜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미숙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숙희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창섭 심순경 심윤철 안경완 안경옥/박지선 안병학 안상진 안승택 안영배 안원기 안정임 안철택 안현수 양선진/임호성 양승문 양영일
양진오 양 희 엄창욱 오문섭 오병현 오신태 오용태 오이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용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진 유동수 유용준 윤명화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상호 윤성아 윤소원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윤호석 이근희 이광모 이교희 이규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남수 이동민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균 이명원 이명은 이미지 이병동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원
이상원 이상훈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연주 이영도 이영윤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미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장근 이장환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희 이정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화 이종길 이종득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종희 이주영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천희 이철환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현미 이현민 이현숙 이현옥 이형규 이형석 이흥기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이효진 임성무 임순광 임은희 임종설 임 향
임현수 임현태 장밝은 장성수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대화 정상기 정수현 정수홍 정승필 정예은 정용태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섭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지욱 정지혜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덕호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현주 조희래 조희재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차광호
차우미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취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경미 최근호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미나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신애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우식 최유리 최은경 최재혁 최정욱 최종태 최철영 최하예 최현겸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 추호식
태찬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한경국 한상훈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현희 허노목 허은경 허 종 현호성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상천 황순규 황순오 황양은 (528명)

연회비 신순임 최명규

평생회원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용곤 김영화 성상희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23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통권 145호 **2023** 9, 10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3년 10월 28일 통권 145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공 동 대 표 || 엄창옥 이두옥 정혜숙 박경로
운 영 위 원 장 || 류영준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 김선희

■ 풀뿌리주민자치

- 동구주민회

대표 : 박호석
운영위원장 : 양희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 김형진
위원 : 강금수 조영태 정은정 김선희 장은우
편집담당 : 김형진

대구참여연대의 힘은 오직 회원, 오직 시민입니다!

대구참여연대가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 25년!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신 회원 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일구어 온
민주와 민생, 자주와 평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목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정이 불러오고 있는
「거대한 퇴행」을 절감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시되고, 노동자 인권이 모욕당하고, 민중의 삶이 고단해지고,
외교적 주권이 실종되고, 역사 정신이 훼손되고...아 아!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야지요!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권력의 횡포에 맞서 온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그 정신 더욱 새롭게 다지며 이 「거대한 퇴행」에 시민과 함께 맞서 보겠습니다.

대구참여연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임원과 활동가들이 애써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 약합니다.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대구참여연대가 믿는 것은 오직 회원, 오직 시민입니다.

그동안의 배려와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박경로·엄창욱·이두옥·정혜숙 올림



Go Beyond
IM DGB

새로운 시대

금융의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요?

지난 55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DGB 금융그룹이
금융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이제 돈을 넘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금융으로

가진 것을 경쟁하던 시대를 넘어서

잘 사는 방법을 탐색하는 금융으로

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금융으로

금융은 여기까지 라는 고정관념

그 한계를 DGB가 넘어서겠습니다.